

“윤석열 검찰 피해자 대거 포함”…범 여권 통합 효과 고려

광복절 특별사면 배경

시간 끌면 논란만 키워 ‘속전속결’
이 대통령 측근은 포함 안 시켜
국민 임명식 ‘통합 메시지’에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논란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조기 특별사면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 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단으로도 풀이된다.

다만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 내부 여론에서도 다수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어, 국론 분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봉합을 위한 지도력 발휘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국무회의의 의결로 조 전 대표와 정경심 전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다수의 정치인이 사면됐다.

광복절 특사 준비 작업이 막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 등을 사면할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조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은 ‘윤석열 검찰’에 대한 문제의식이 깊은 이 대통령이 곧바로 사면에 나서 주리란 기대를 품었다.

반면 새 정부가 완전한 틀을 갖추기도 전에 진행되는 극명한 논란의 중심에 선 인사에 대한 사면이 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조 전 대표를 비롯해 이번 사면 대상이 된 인사 상당수가 친문(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데, 이 대통령이 그간 당내 친문 인사들과 일정 부분 거리를 뒀었다는 시선도 이런 예상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정치권의 이런 조심스러운 예상을 벗어나 상대적으로 큰 폭의 정치인 사면을 단행했다.

예초 12일로 예상됐던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겨 연 것 역시 사실상 결심을 굳힌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이 대통령 특유의 좌고우면 없는 ‘정면 돌파’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도 나온다.

같은 맥락에서 이런 결정의 배경에도 ‘여차피 한번은 겪어야 할 논란이라면 일찍 털고 가는 게 낫다’는 판단이 깔렸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개혁론을 공유하는 지지층 내에 조 전 대표 사면 여론이 형성돼 있는 데다 시민사회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사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 대통령으로서는 사면 요구 자체를 계속 외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광복절 특사를 넘긴다면 연말 성탄절 혹은 신년특사에서 같은 안건을 다뤄야 하는데, 이 경우 자칫 내년 지방선거 개입 논란으로까지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인식도 있었을 것

광복절 특별사면 주요대상자

2025년 8월 15일 0시 석방(일반범죄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등 총 83만6,687명)

정치인 및 주요공직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정차인 및 주요공직자
홍문종 전 의원*	전형집행면제 및 복권
정찬민 전 의원*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형선고설호 및 복권	윤미향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정경심 전 중앙대 교수(조국 전 대표 아내)
복권	심학봉 전 의원*
	송광호 전 의원
	윤건영 전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경제인

전형집행면제 및 최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복권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연합뉴스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자료: 법무부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	
한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이런 분석이다.

임기 초 권력기관 개혁 등을 추진할 국정 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도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와 조기 대선에서 지지를 보낸 범 여권 세력의 ‘청구서’ 계산을 마치고 ‘헌법 수호 세력’의 통합 및 확장고 협조를 요구할 명분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불필요한 논란은 최소화하면서 여권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다만 우려했던 대로 역효과도 가시화하고 있어 대통령실은 여론 추이를 주시하는 모습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18세 이상 2천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6.5%로 6.8%포인트 떨어졌다.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급락한 원인 중에는 조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리얼미터 측의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지층 내 일부 조 전 대표 사면 반대론자 가운데서는 불만을 토로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사면 이후의 중도·보수층 여론을 달래고 내부 지지층의 분열을 막는 ‘이중의 통합’이 향후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금주 중 이어지는 80주년 광복절 행사, 치르지 못한 취임식을 갈음하는 국민 임명식 행사 등을 계기로 설득력 있는 ‘통합의 메시지’를 내놓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베트남은 사돈의 나라”

이 대통령-또 럽 서기장 정상회담 “교역액 1500억달러 달성”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또 럽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베트남은 대한민국에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이번 방문은 한국에서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첫 국빈 방문이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베트남을 중히 여긴다는 점을 표현하는 것”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개인적으로도 베트남은 아주 위대한 국민의 나라라고 생각한다”며 “근대사를 돌아봐도 외국 군대와 싸워 이겨내고 통일을 이뤄낸 저력 있는 국가임이 분명하다. 베트남이 이런 저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해 세계 중상 국가의 하나로 자리 잡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국민의 결혼 역시 10만쌍가량에 이른다. ‘베트남과 한

국은 사돈의 나라’라는 표현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베트남 럽 서기장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빈 초청을 받아 영광스럽다”며 “이 대통령의 선출을 축하드린다. 이 대통령의 명성과 전략적 비전을 보면서 이 대통령이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만들 것이라는 확신을 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은 올해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양국은 방산 및 치안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국회와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럼 서기장도 한국 기업의 뛰어난 경쟁력

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한국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에 양국이 체결한 ‘원전분야 인력양성 협력 MOU(양해각서)’가 향후 다양한 원전 분야로 양국이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인공지능(AI),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분야 공동연구 및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며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는 등 핵심 광물분야 협력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등 다자외교를 통한 교류도 활발히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베트남 측의 참석을 요청했고, 럽 서기장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며 “베트남도 2027년 푸꾸옥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국은 두 APEC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당 “주식 양도세 50억 유지 의견 정부에 전달”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로 유지해야 한다고 정부에 전달했다.

민주당 한정에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전달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복수안 같은 것은 제

시하지 않았다”며 “당내에도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는데, (정부의 세제개편안) 자본 시장의 흐름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주식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 외에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 등을 유인해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한다면 결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도 일반회계를 써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당정협의 결과를 이날 중 당내 ‘코스피5000특위’나 기획재정부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발표가 곧 있어서 기재부와는 이래저래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다음 당정 전까지는 (세제개편안 관련) 정리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탁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